

KORDI ISSUE PAPER

제2026-01호

발행일 2026. 4. 28.

발행인 김수영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우)04512 TEL 02-6731-612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연령집단별 변화 추이 : '13~'25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부연구위원
 (kwkim@kordi.or.kr)

요약

- 본고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이를 위해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등 총 5개 시점 13,671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참여 이유, 생애 주된일자리 근로형태, 종사직종, 노후생활 준비 정도, 향후 사업참여 희망 여부, 희망 참여일 수 및 시간, 희망 급여액,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의견 등을 분석하였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기·후기고령층의 정보접근 및 활용역량을 고려한 접근성 제고 전략, 생애 일 경험 및 역량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직무 연계성 강화, 민간 노동시장 연계 및 노인일자리 활동 강도 등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통계구축 기반 마련 등을 정책 방안을 제시함

들어가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대상 규모는 '04년 2만5천 명을 목표로 시작하여 '26년 현재 115만2천 명으로 약 46배 증가함
 -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의 규모가 계속 확대됨과 동시에 질적 특성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고령층 내 이질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러한 고령층의 변화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도 변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07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함(<표 1> 참고)
 - 본 조사는 '07년 최초에는 참여노인과 운영기관 실태조사를 각각 나누어 진행하다가, '13년부터 통합하여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음. 한편 '22년부터는 국가승인통계(제464001호)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표 1>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추진 연혁

연도	참여노인 실태조사	기관운영 실태조사	비고
2007	모집단 121,762명 중, 2,987명 표본조사	914개 기관 전수조사, 817개 기관 응답(89.4%)	
2010	모집단 242,318명 중, 1,500명 표본조사	-	
2011	-	1,213개 기관 전수조사, 777개 기관 응답(64.1%)	
2012	모집단 222,381명 중, 2,005명 표본조사	-	
2013	모집단 234,867명 중, 2,022명 표본조사	1,215개 기관 중, 602개 기관 표본조사	
2016	모집단 320,521명 중, 2,500명 표본조사	1,205개 기관 중, 600개 기관 표본조사	
2019	모집단 535,427명 중, 3,086명 표본조사	1,205개 기관 중 747개 기관 표본조사	
2022	모집단 872,613명 중, 3,079명 표본조사, 대기자 모집단 137,689명 중, 518명 표본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464001호)
2025	모집단 1,194,665명 중, 2,985명 표본조사, 대기자 모집단 207,093명 중, 500명 표본조사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DB자료를 활용한 수행기관 및 전담인력 전수조사	

본 고는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집단별 특성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분석자료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석자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으로서 각 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에 참여한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등 총 13,671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음.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각 연도 전수자료가 아닌 표본 정보임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표 2> 분석대상 자료의 일반적 현황

(n=13,671, 단위: 연도 내 %, 세)

구분		전체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2025년
성별	남성	36.5	35.0	31.3	38.3	38.2	38.2
	여성	63.5	65.0	68.7	61.7	61.8	61.8
연령	60~69세	27.3	27.0	17.4	22.0	35.5	33.0
	70~79세	56.5	62.7	67.7	59.9	47.7	48.5
	80세 이상	16.1	10.3	14.9	18.0	16.8	18.5
	평균(sd)	73.35(6.00)	72.78(5.31)	74.36(4.98)	74.07(5.69)	72.44(6.58)	73.07(6.66)
권역	수도권	29.1	35.0	30.8	32.8	25.0	24.0
	강원권	6.6	5.5	6.6	7.4	6.5	6.8
	충청권	14.3	11.2	13.3	12.0	17.1	16.8
	호남권	18.3	17.3	18.4	17.9	17.9	19.9
	영남권	29.2	29.8	28.8	27.7	30.5	29.4
	제주권	2.4	1.3	2.2	2.3	2.9	3.1
가구형태	1인가구	32.7	29.9	38.8	31.5	31.3	32.5
	다인가구	67.3	70.1	61.2	68.5	68.7	67.5
교육수준	중졸이하	68.2	79.0	82.2	65.7	61.3	59.1
	고졸	23.6	12.0	13.7	25.5	29.0	32.1
	대졸이상	8.2	9.0	4.2	8.8	9.7	8.8

주: 1)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조사 결과임

2) 본 고의 목적에 따라 원자료의 일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므로, 각 연도 실태조사 결과와는 무관함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 **(분석내용 및 방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정,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참여 이유, 생애 주된일자리 경험 여부 및 근로형태·직종, 노후생활 준비 정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희망 참여일 수 및 시간, 급여액,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등 실태조사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전기·후기노인의 연령집단별 특성 차이와 각 조사시점별 변화 추이를 분석함
- **(분석결과의 해석)** 본고는 약 15년에 걸친 5개 시점(2013, 2016, 2019, 2022, 2025년)의 자료를 활용해 전기노인(74세 이하)와 후기노인(75세 이상) 집단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임(<표 3> 참고)
 - 이는 단순히 "현재 전기·후기노인 집단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넘어, "시간 흐름에 따라 전기·후기노인 집단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님
 - 특히 2016년 조사시점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025년 조사시점에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유입되기 시작한 해임. 각 시점마다 새로운 인구가 전기노인 집단으로 유입되는 한편, 이전 시점의 전기노인 연령층이 시간 흐름에 따라 후기노인 집단으로 편입되면서 각 집단의 구성은 조심씩 변화함
 - 본 고에서 관찰되는 시점별 변화와 전기·후기노인 집단의 차이에는 이러한 인구구성의 점진적 변화가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다만 이를 세대 간 단절적 차이로 해석하기보다는, 노년기에 진입하는 인구의 특성이 시간적 흐름과 함께 점진적으로 변화해온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표 3> 분석대상 자료의 코호트 특성

분석집단 구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시점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2025년
후기노인 (75세 이상)	~1937년생	~1940년생	~1943년생	~1946년생	~1949년생
전기노인 (60~74세 이하)	1938년생 ~ 1952년생	1941년생 ~ 1955년생	1944년생 ~ 1958년생	1947년생 ~ 1961년생	1950년생 ~ 1964년생
신규 유입 코호트 특성		▶ 1차 베이비붐세대 유입 시작 (55~63년생)	▶	▶	▶ 유입 완료
					▶ 2차 베이비붐세대 유입 시작 (64~74년생)

주: 각 시점의 조사는 당해연도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횡단면 표본조사로, 동일 개인을 추적하는 패널조사가 아님.
시점별 집단 특성 변화에는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신규 유입 코호트의 특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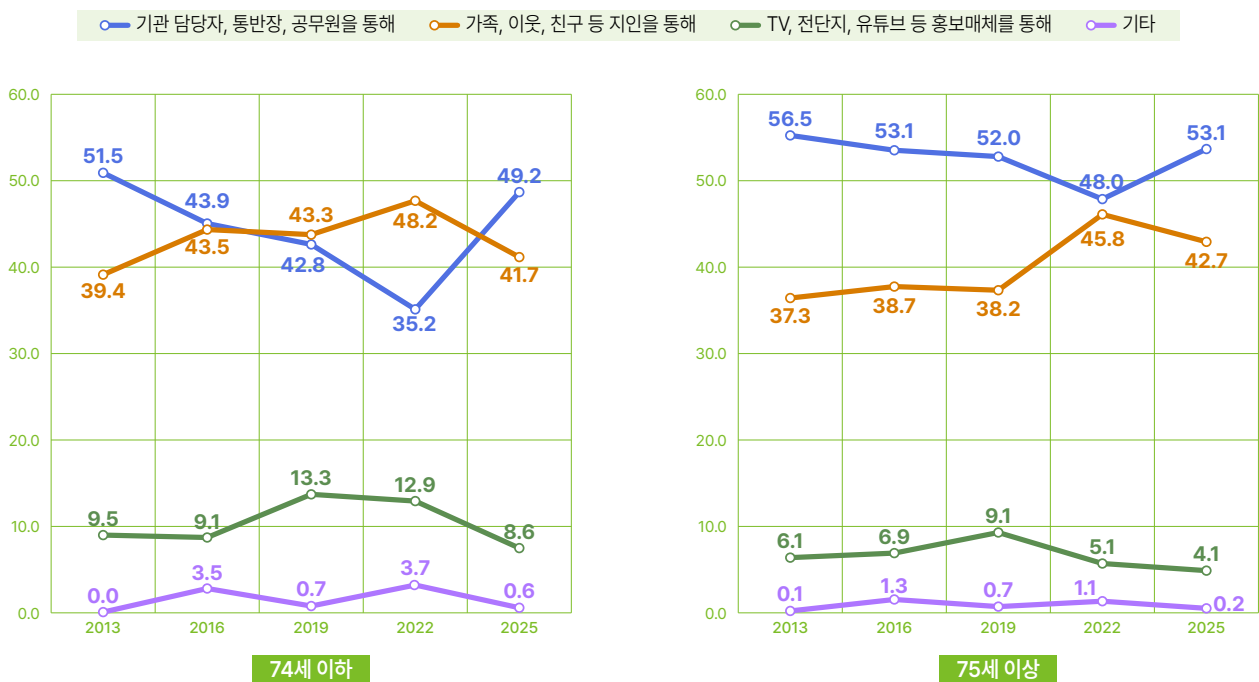
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임. 사업 인지 경로의 주된 내용은 크게 1) 공식적인 인식 경로(기관 담당자, 통반장, 공무원 등), 2) 비공식적 인식 경로(가족, 이웃, 친구 등), 3) 홍보매체를 통한 인식 경로(TV, 전단지, 유튜브 등)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본 분석결과 연령집단에 따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음. 또한 두 연령집단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주된 정책 인지 경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그림 1])

- **(전기노인 : 74세 이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중 74세 이하 전기노인의 경우, 2013년 당시에는 주로 사업 제공주체인 공식적 인지 경로(기관 담당자, 통반장, 공무원 등)를 통해 사업을 인지한 비율이 51.5%로 가장 높았음. 그러나 점차 감소하여 2022년 35.2%까지 낮아졌다가 2025년 49.2%로 다시 반등함. 한편 비공식적 인지 경로(가족, 이웃, 친구 등)를 통한 사업 인지 비율은 2013년 39.4%에서 2022년 48.2%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5년 41.7%로 소폭 감소함. 즉, 74세 이하 집단은 2022년을 기점으로 지인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정책 인지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인지보다 약간 앞질렀다가 다시 2025년 역전되는 흐름을 보임
- **(후기노인 : 7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중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경우, 전 시기에 걸쳐 공식적인 인식 경로(기관 담당자, 통반장, 공무원 등)를 통한 사업 인지 비율이 48.0~56.5%로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음. 비공식적 인식 경로(가족, 이웃, 친구 등) 비율은 37.3~45.8% 수준에서 비슷한 등락을 보였으나, 74세 이하 전기노인에 비해 비공식적 인식 경로의 상승 폭이 완만한 편임. 한편 홍보매체(TV, 전단지, 유튜브 등)를 통한 인지 비율은 전기·후기 노인 두 집단 모두 한 자릿수에서 소폭 등락하는 수준에 그쳐 그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두 집단을 비교하면, 74세 이하 전기노인은 기관 등 공식 채널과 지인 등 비공식적 인식 경로의 비중이 시점에 따라 역전될 만큼 비공식적 관계망의 역할이 커진 반면, 75세 이상 후기노인은 여전히 기관 담당자, 통반장, 공무원 등 공식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음
 - 이는 후기 노인일수록 디지털 접근성이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연령집단별 정보 접근 및 활용 역량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노인 집단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수행기관 등에서 대면으로 찾아가는 상담, 홍보 등의 노력이 요구됨

[그림 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n=13,671, 단위: 연령집단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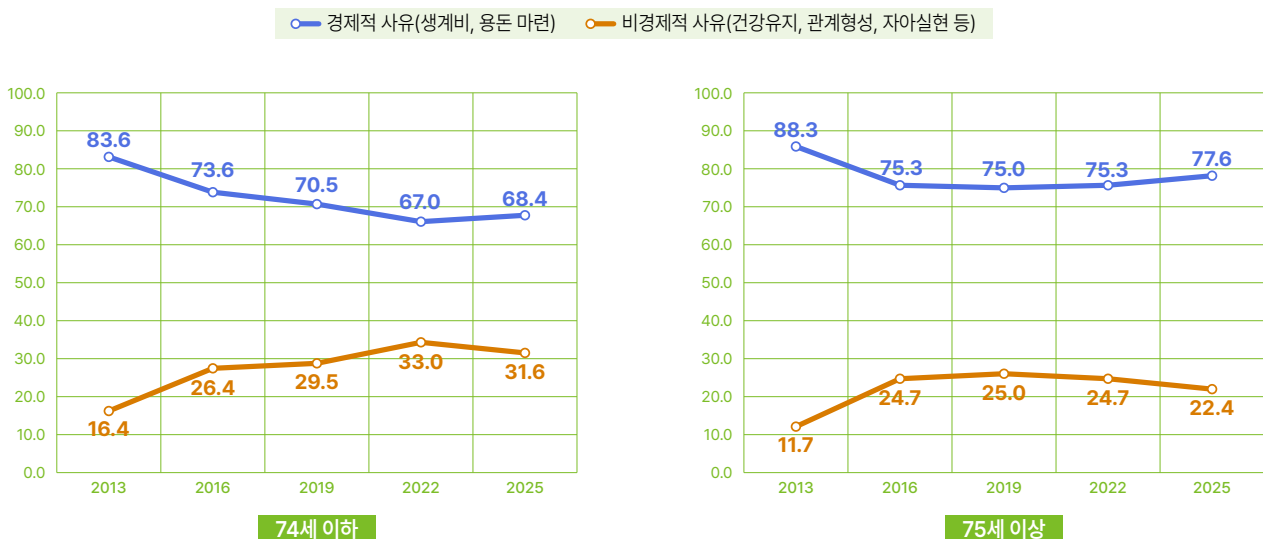
주: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조사 결과임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임. 고령자들은 각 개인마다 다양한 사유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하게 되는데, 크게 내용을 구분하면 1) 경제적 사유(생계비, 용돈 마련)과 2) 비경제적 사유(건강유지, 관계형성, 자아실현 등)로 나누어볼 수 있음. 본 분석 결과 두 연령집단 모두 경제적 사유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나, 시간 흐름에 따라 점차 비경제적 사유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2])
- **(전기노인 : 74세 이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중 74세 이하 전기노인의 경우, 경제적 사유(생계비 및 용돈 마련 등)로 본 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2013년 83.6%에서 2022년 67.0%까지 점차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도 68.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이에 반해 비경제적 사유(건강유지, 관계형성, 자아실현 등)의 비율은 2013년 16.4%에서 2025년 31.6%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후기노인 : 7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중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경우, 경제적 사유(생계비 및 용돈 마련 등) 비율이 2013년 88.3%에서 2022년 75.3%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77.6%로 소폭 반등하였음. 한편 비경제적 사유(건강유지, 관계형성, 자아실현 등)는 2013년 11.7%에서 2019년 25.0%까지 증가한 후, 2022년 24.7%, 2025년 22.4%로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 두 집단을 비교하면, 후기노인 집단이 전기노인에 비해 경제적 사유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비중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음. 이는 후기노인일수록 노후의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을 수 있음을 반영함
- 반면 74세 이하 전기노인 집단에서는 비경제적 참여 동기(건강유지, 관계형성, 자아실현 등)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 노인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변화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고령자의 소외와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한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며, 연령집단별로 보다 차별화된 활동 모델을 통해 다양한 참여 동기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그림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n=13,671, 단위: 연령집단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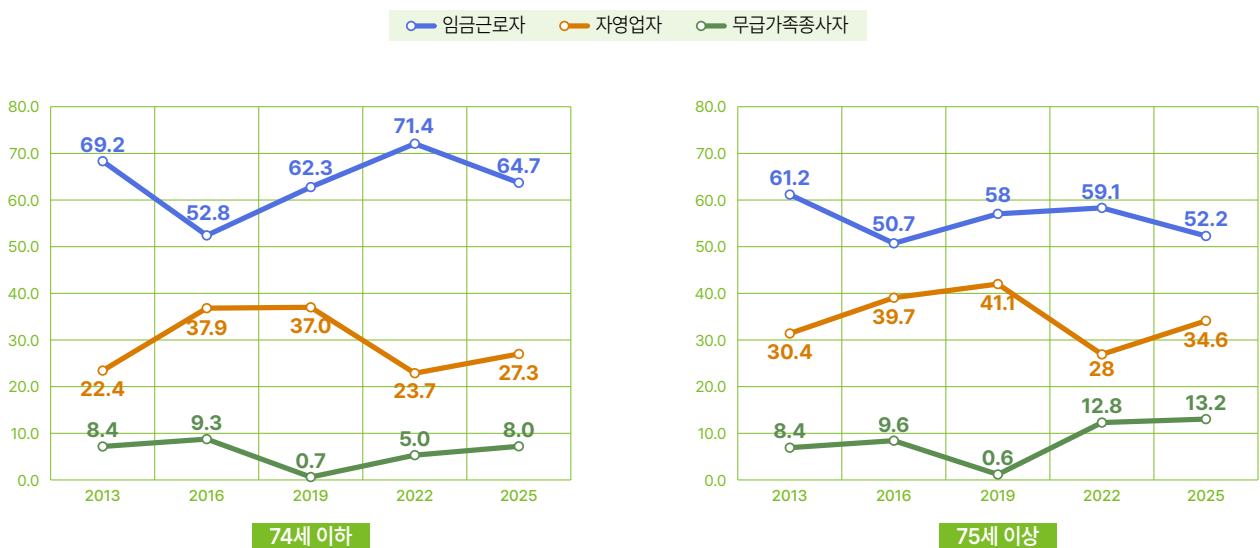
주: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조사 결과임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3. 생애 주된일자리 근로형태 및 직종

- 생애 주된일자리는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장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생애 최초 일자리(수입을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임. 전체 13,671명의 자료 중, 주된일자리 경험이 있는 10,32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형태와 직종을 분석하였음. 근로형태는 1) 임금근로자, 2)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직종은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군인, 2)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 기능, 농림어업, 기계 종사자, 4) 단순노무,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봄
- 본 분석 결과 생애 주된일자리 근로형태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두 연령집단 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그림 3])
 - (전기노인 : 74세 이하) 전기노인 집단은 주된일자리 경험이 임금근로자였던 비율이 2013년 69.2%에서 2016년 52.8%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71.4%로 다시 상승한 후 2025년 64.7%로 소폭 낮아짐.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 3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후 감소세를 보여 2025년 27.3%를 보임.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전 시기에 걸쳐 5~9% 수준에서 등락하였음
 - (후기노인 :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은 임금근로자 비율이 전기노인 집단보다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25년 기준 52.2%로 집계되었음.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34.6%로 전기노인 집단(27.3%)보다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율도 13.2%로 전기노인 집단(8.0%)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이를 종합하면, 전기노인은 임금근로 경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제도권 내 고용 경험이 풍부한 반면, 후기노인은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 경험 비율이 높아 비공식적·가족 중심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세대별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경제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설계 시 연령집단별로 상이한 직업 경력을 고려한 직무 매칭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3] 생애 주된일자리 근로형태

(n=10,321, 단위: 연령집단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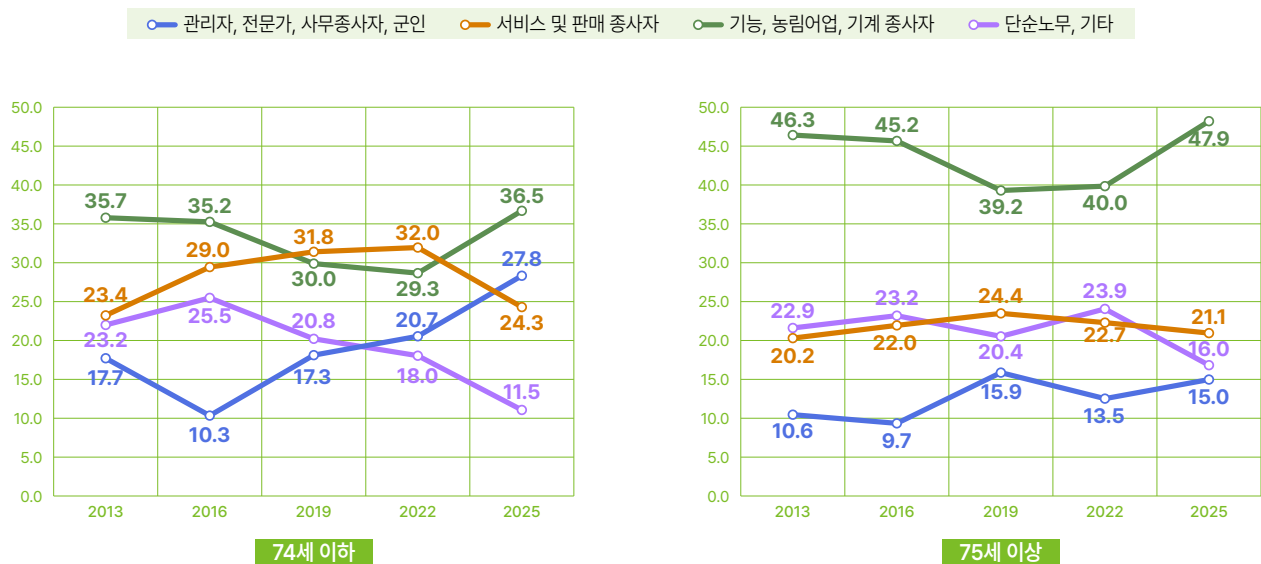
주: 2013년 1,430명, 2016년 1,883명, 2019년 2,002명, 2022년 2,557명, 2025년 2,449명 조사 결과임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 생애 주된일자리 직종은 두 연령집단 모두 기능·농림어업·기계 종사자 비율이 높으나, 연령집단 간 관리·전문직 비중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시간에 따른 변화도 드러남([그림 4])

- **(전기노인 : 74세 이하)** 전기노인 집단은 기능·농림어업·기계 종사자 비율이 2013년 35.7%에서 2022년 29.3%로 감소하였다가 2025년 36.5%로 반등함.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비율은 2013년 17.7%에서 2025년 27.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단순노무 비율은 2016년 25.5%를 정점으로 2025년 11.5%까지 감소함
- **(후기노인 :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은 기능·농림어업·기계 종사자 비율이 전 시기에 걸쳐 39.2~47.9%로 가장 높게 유지되었음.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비율은 2025년 15.0%로 전기노인 집단(27.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이를 종합하면, 전기노인은 관리·전문·사무직 경험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업 경력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후기노인은 기능·농림어업·기계 종사 경험이 집중되어 있어 직종 경력의 차이가 뚜렷함. 이에 연령집단별 일 경험과 기술 보유 등을 바탕으로 한 적합 일자리 설계가 요구되며, 고부가가치 직무 모델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4] 생애 주된일자리 직종

(n=10,321, 단위: 연령집단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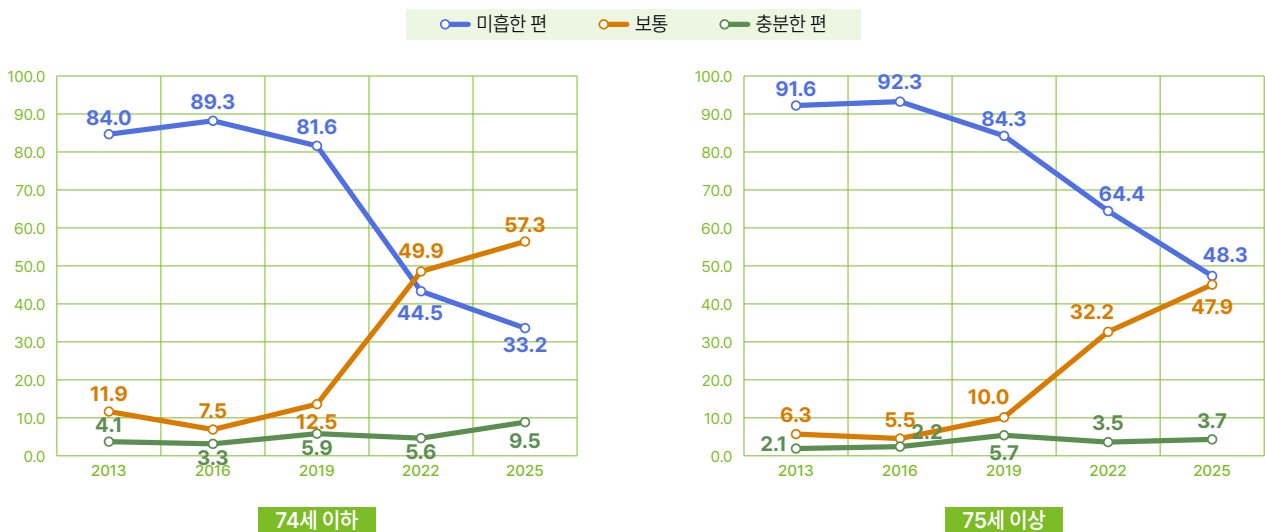
주: 2013년 1,430명, 2016년 1,883명, 2019년 2,002명, 2022년 2,557명, 2025년 2,449명 조사 결과임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4. 노후생활 준비 정도

- “귀하의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임. 분석결과는 1) 미흡한 편(매우미흡+미흡), 2) 보통 수준, 3) 충분한 편(충분+매우충분)으로 제시하였음.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는 두 연령집단 모두 미흡 비중이 높았으나,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보통 수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남([그림 5])
 - (전기노인 : 74세 이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중 74세 이하 전기노인의 경우, 노후생활 준비가 '미흡한 편'이라는 응답은 2013년 84.0%, 2016년 89.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 44.5%, 2025년 33.2%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2016년 7.5%에서 2025년 57.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충분한 편'도 2025년 9.5%로 소폭 상승하였음
 - (후기노인 : 7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중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경우, 전기노인 집단과 유사한 방향의 변화를 보였으나, 변화 폭은 다소 완만하였음. '미흡한 편' 비율은 2016년 92.3%에서 2025년 48.3%로 감소하였고, '보통'은 같은 기간 5.5%에서 47.9%로 증가하였음. 다만 2025년 기준으로 '미흡한 편' 비율이 전기노인(33.2%)보다 후기노인 집단(48.3%)에서 여전히 높게 나타나, 후기노인의 노후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두 연령집단 모두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미흡'에서 '보통' 수준으로 이동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함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베이비붐 세대의 신노년층의 특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노후 준비 수준의 향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시마다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기대 수준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 요구됨.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로 인한 요인이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음

[그림 5] 노후생활 준비 정도

(n=13,671, 단위: 연령집단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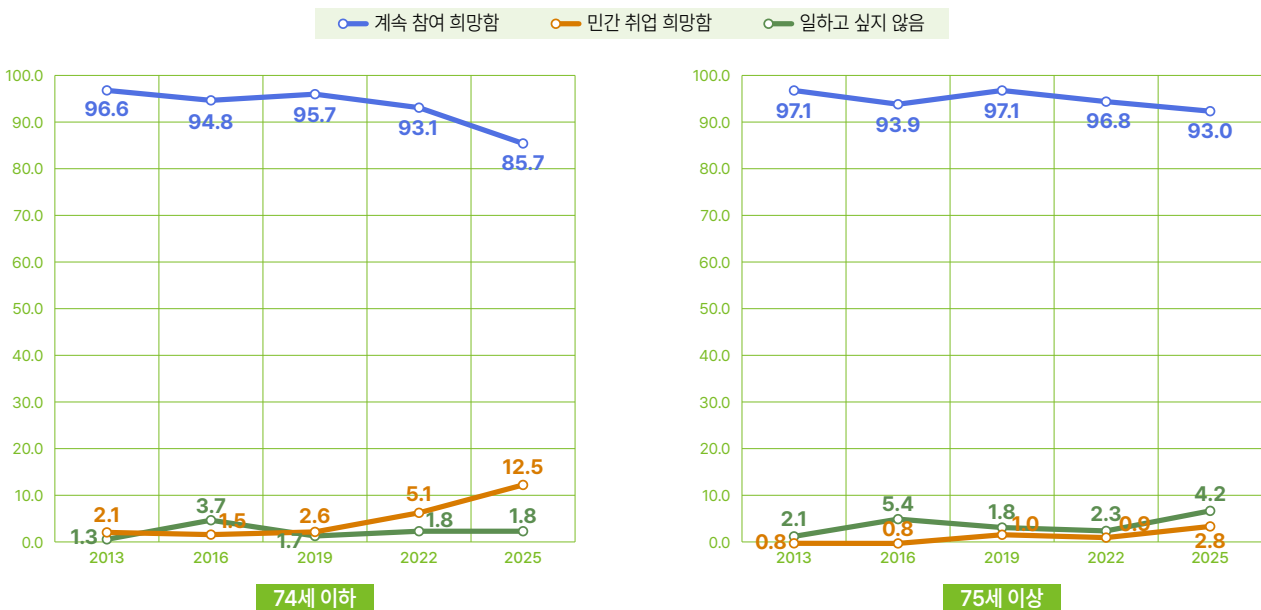
주: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대상 분석 결과임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5.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 여부, 희망일 수, 시간, 급여액

-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응답 결과는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2) (노인일자리가 아닌) 민간 취업을 희망, 3) 일을 그만두고 싶음으로 나누어 제시함. 또한 전체 13,671명의 자료 중 12,845명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계속 희망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추가 조사로서 희망 참여일 수(주당), 희망시간(회당), 희망 월 급여액(만원)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함
-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향후 계속 참여 희망 비율은 두 연령집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노인을 중심으로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최근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남([그림 6])
 - (전기노인 : 74세 이하) 전기노인 집단은 노인일자리사업 계속 참여 희망 비율이 2013년 96.6%에서 2025년 85.7%로 감소하였음. 특히 민간 취업 희망 비율이 2013년 2.1%에서 2025년 12.5%로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됨.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3~3.7% 수준으로 큰 변화 없이 낮게 유지되었음
 - (후기노인 :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노인일자리사업 계속 참여 희망 비율이 93.0~97.1%로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민간 취업 희망 비율은 2025년 2.8%로 전기노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2025년 4.2%로 소폭 증가함
 - 두 집단을 비교하여 가장 주목한 부분은 민간 취업 희망 비율의 격차임. 2025년 기준 전기노인의 민간 취업 희망 비율(12.5%)은 후기노인 집단(2.8%)의 약 4.5배에 달함. 이는 전기노인 집단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시적 참여 형태로 인식하고,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민간 취업으로 연계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연령집단별 정책의 기대 욕구가 상이한 만큼 차별화된 정책적 전략이 요구됨

[그림 6]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여부

(n=13,671, 단위: 연령집단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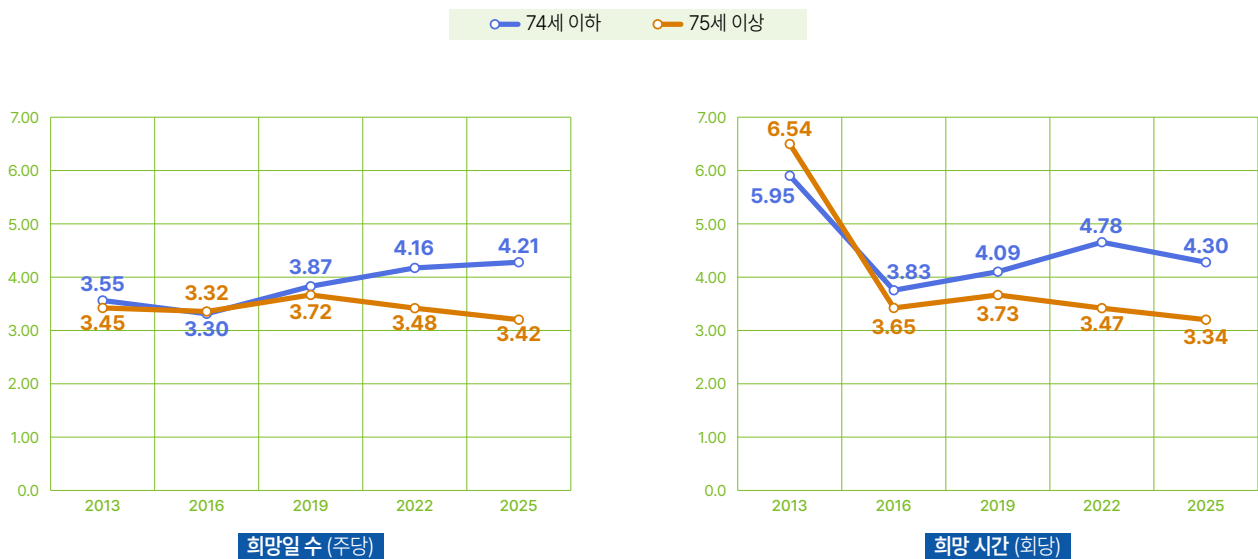
주: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대상 분석 결과임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 노인일자리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희망 참여일 수와 시간은 두 연령집단 간 일관된 차이를 보이며, 전기노인이 더 많은 활동량을 선호함([그림 7])

- 희망 참여일 수(주당)를 보면, 전기노인은 2013년 3.55일에서 2025년 4.21일로 증가한 반면, 후기노인은 2013년 3.45일에서 2025년 3.42일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 전 시기에 걸쳐 전기노인의 희망 참여일 수가 유의미하게 많았으며($p < .001$), 두 집단 간 격차는 2022년 이후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희망 참여시간(회당)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 전기노인은 2013년 5.95시간에서 2025년 4.30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후기노인은 2013년 6.54시간에서 2025년 3.34시간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단시간 참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후기고령층의 희망 참여시간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후기고령층 노인들이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의 활동을 선호함을 나타내며, 현행 공익활동 중심의 단시간 프로그램이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줌. 반면 전기노인은 주 4~5일 수준의 비교적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다양한 활동강도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 확대가 필요함

[그림 7]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희망 참여일 수, 시간

(n=12,845, 단위: 연령집단내 희망일/주, 시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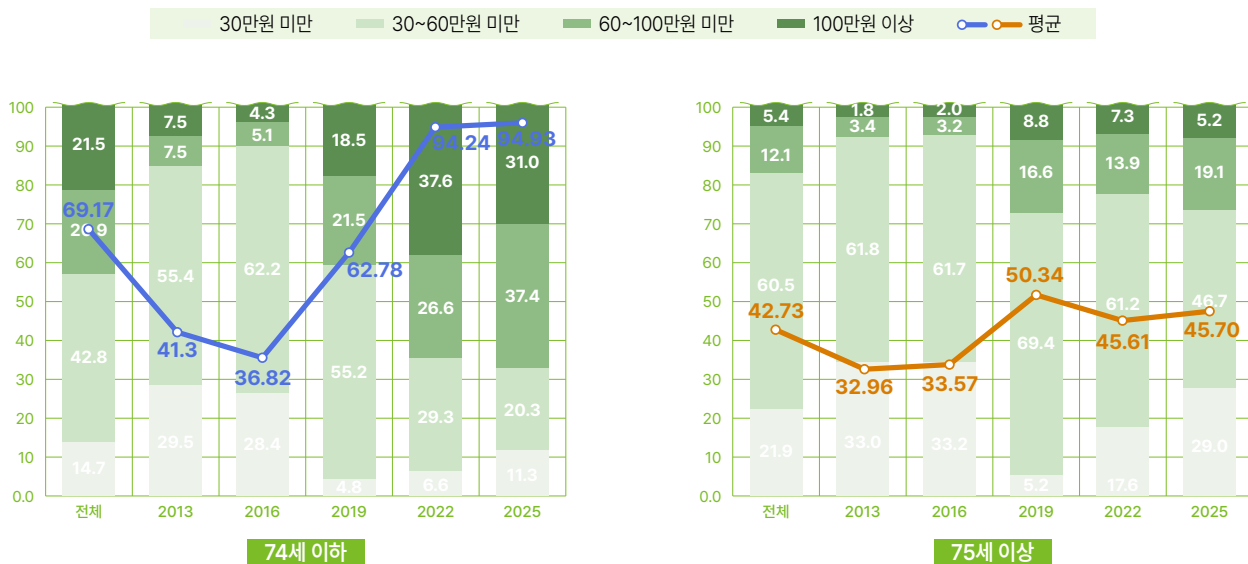
주: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대상 분석 결과임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희망 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두 연령집단 모두 희망 급여액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노인의 희망 급여 수준이 후기고령층에 비해 일관되게 높으며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그림 8])

- **(전기노인 : 74세 이하)** 전기노인 집단의 평균 희망 급여액은 2013년 41.30만원에서 2022년 94.24만원, 2025년 94.9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구간별로 보면, '30~6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비율이 2013년 55.4%에서 2025년 20.3%로 감소한 반면, '60~100만원 미만'(37.4%)과 '100만원 이상'(31.0%)을 희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고급여 선호 경향이 뚜렷해졌음
- **(후기노인 :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평균 희망 급여액은 2013년 32.96만원에서 2025년 45.7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전기노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음. '30~60만원 미만' 희망 비율이 2025년에도 46.7%로 가장 높게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저급여 수준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었음
- 두 집단의 평균 희망 급여액 차이는 2013년 약 8만원에서 2025년 약 49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 시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 < .001$). 이는 전기노인 집단이 실질적인 노동 대가로서의 급여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현행 공익활동 중심의 낮은 활동비 구조가 전기노인의 참여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연령집단별 급여의 기대 수준을 반영한 급여 체계 개선이 필요함

[그림 8]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희망 급여액

(n=12,845, 단위: %, 연령집단내 희망급여액 만원/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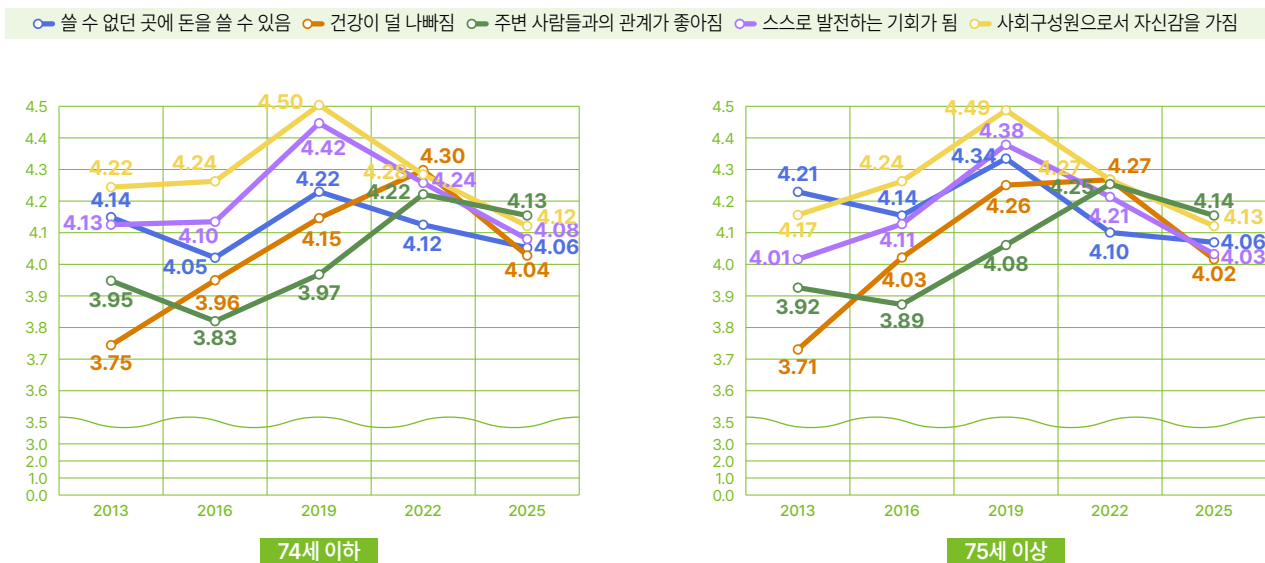
주: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대상 분석 결과임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를 비교할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응답 결과는 1)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음(급여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됨), 2) 건강이 덜 나빠짐(건강상태가 좋아짐), 3)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짐(가족, 친지, 이웃 등과의 관계가 좋아짐), 4)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이 생김(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 5)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 등 5개 영역에 대해 5점 만점으로 결과를 제시함([그림 9])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긍정적 변화 인식은 두 연령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높으며, 시점에 따른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전기노인 : 74세 이하) 전기고령층은 5개 항목 모두 4점 이상(5점 만점)의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음. 특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짐’(4.28점)과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됨’(4.20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짐’은 2019년 이후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음.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음’과 ‘건강이 덜 나빠짐’ 항목은 2019년에 높은 점수를 기록한 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띠
 - (후기노인 : 75세 이상) 후기고령층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짐’(4.28점)과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음’(4.18점)이 높게 나타남.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대부분의 항목에서 점수가 높아졌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는 흐름을 보임
 - 두 집단 간 비교에서는 초기 시점(2013~2019년)에 일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2022년과 2025년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긍정적 효과가 연령과 무관하게 두 집단에서 유사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시사함.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자기효능감, 건강 측면에서도 전기·후기 노인 모두에게 고르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n=13,671, 단위: 연령집단내 평균점수 / 5점기준)



주: 2013년 2,022명, 2016년 2,500명, 2019년 3,086명, 2022년 3,078명, 2025년 2,985명 대상 분석 결과임
 자료: 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나가며

- 본고는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2025년 등 5개 시점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기노인(74세 이하)과 후기노인(75세 이상) 연령집단별 특성 및 의식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를 확인함
 -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에서 전기노인은 공식 채널과 지인 등 비공식 경로의 비중이 시점에 따라 역전될 만큼 비공식적 관계망의 역할이 커진 반면, 후기노인은 기관 담당자·통반장·공무원 등 공식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음. 홍보매체(TV, 전단지, 유튜브 등)를 통한 인지 비율은 두 집단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쳐 그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확인함
 -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에서 두 집단 모두 경제적 사유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시간 흐름에 따라 비경제적 사유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특히 전기노인의 비경제적 참여 동기는 2013년 16.4%에서 2025년 31.6%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기노인은 경제적 사유의 비중이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높게 유지되어 두 집단 간 참여 동기의 구조적 차이가 확인됨
 - 셋째, 생애 주된일자리 근로형태에서는 전기노인의 임금근로자 경험 비율이 높아 제도권 고용 경험이 풍부한 반면, 후기노인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아 비공식·가족 중심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많았음. 종사 직종에서는 전기노인의 관리·전문·사무직 경험 비율이 2013년 17.7%에서 2025년 27.8%로 빠르게 증가하여 참여자의 직업 경력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후기노인은 기능·농림어업 종사 경험이 집중되는 양상이 지속되었음
 - 넷째, 노후생활 준비 정도에서 두 집단 모두 '미흡한 편'에서 '보통' 수준으로 이동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나, 2025년 기준 후기노인의 '미흡한 편' 비율(48.3%)이 전기노인(33.2%)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 후기노인의 경제적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남아있음을 확인함
 - 다섯째,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비율은 두 집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노인의 민간 취업 희망 비율이 2013년 2.1%에서 2025년 12.5%로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됨. 희망 참여일 수와 시간에서는 전기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해 더 많은 활동량을 일관되게 선호하였으며, 두 집단 간 격차가 2022년 이후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희망 급여액은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2013년 약 8만원에서 2025년 약 49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전기노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동 대가로서의 급여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여섯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긍정적 변화 인식은 두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2022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연령에 무관하게 전기·후기 노인 모두에게 고르게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줌

- 위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실천적 개선과제를 제시함
 - 첫째, 연령집단별 정보 접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함. 후기노인은 공식 채널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정보 활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찾아가는 대면 상담·홍보 등 오프라인 정책 홍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반면 전기노인을 대상으로는 유튜브·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채널 다각화가 요구됨. 단, 디지털 전환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인프라와 잠재 수요층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
 - 둘째, 연령집단별로 상이한 직업 경력과 기술 보유 수준을 반영한 직무 연계성 강화가 요구됨. 전기노인의 경우 관리·전문·사무직 경험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무 모델 개발이 필요함. 후기노인에 대해서는 신체적 특성과 기존 직업 경력을 고려한 적합 직무 설계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셋째, 전기노인을 중심으로 민간 취업 희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사업이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 등 민간연계 사업유형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두 집단 간 희망 활동량과 급여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일 직무 내에서도 활동일수·시간·급여 수준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사업유형 개편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전기·후기 노인의 특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장기적 통계 구축 체계 마련이 필요함. 본고는 5개 시점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령집단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사 시점마다 변수 구성과 응답범주가 일부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 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행정데이터 연계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근거기반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통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참고문헌

김가원(2025).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10년 전후 변화 특성과 시사점: '12년, '22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KORDI ISSUE PAPER 제2023-1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각 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및 원자료.